

“동계올림픽 공기 차질 우려”

정부계획 지연에 내달부터 동절기 공사 중단
완공 2017년 하반기...2월 테스트이벤트 불투명

이르면 내달부터 동절기 공사가 중단될 예정이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5일 도와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등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 대해 발주처별로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단이 이르면 내달부터 시작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겨울철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공사가 중단되고 최저기온이 4°C이하일 경우 물사용 공사는 전면 중지된다.

이에 따라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정선 중봉 알파인 경기장과 평창 슬라이딩 센터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이르면 내달 공사가 중지되고 12월 중에는 전체 현장에서 공사가 중지된다.

■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공정률 (2015년 9월말 현재)

분야	공사기간	사업비	공정률
정선 알파인경기장	2012-2017년	1729억원	28.1%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2012-2017년	1241억원	44.8%
평창 보광스노보ورد	2014-2017년	692억원	12.6%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2012-2017년	1373억원	9.9%
강릉 아이스 아레나	2012-2016년	1305억원	30.6%
강릉 하키센터	2012-2016년	1075억원	30.6%
강릉 관동 하키 센터	2012-2016년	561억원	35.5%
강릉 컬링 센터	2012-2016년	93억원	15.7%

(자료:강원도)

정부의 절감 예산과 일부 공사 의 경우 세부내용 확정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절기 공사 중단까지 겹쳐 절대공기가 턱없이 부족해 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7년 완공예정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해 완공 예정인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터와 평창 보광스노보ورد 경기장은 각각 48%와 12%다.

대부분의 경기장 완공시기는 2017년 하반기며 그해 2-3월에 월드컵대회 등 테스트이벤트를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공정상으로는 테스트이벤트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이 도와 정부간 입장차 때문에 너무 늦게 결정돼 현재로는 2017년 상반기에 테스트이벤트를 치르는 것은 무리”라며 “각 공사 현장에서 공사 속도를 재촉하고는 있지만 시멘트 양생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靑대변인 정연국

춘추관장 육동인

<춘천출신>



정연국



육동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변인에 정연국(54) MBC 국장을, 춘추관장에 춘천출신의 육동인(53)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정 대변인은 울산태생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MBC 뉴스투데이 앵커, 런던특파원, 사회2부장 등을 거쳐 올 3월부터 시사제작국장으로 일했다.

육 춘추관장은 춘천태생으로 춘천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한 뒤 뉴욕특파원과 논설위원을 거쳐 국회사무처 공보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원회 대변인으로 근무해 왔다.

육 춘추관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의 동생이다.

도 실·국 주무과장 직렬 확대

규칙개정...기술직 서기관도 과장 임명

강원도가 행정직이 맡아오던 각 실·국 주무과장의 보직을 복수 직렬(행정·기술)로 확대한다.

도는 최근 일·능력 중심의 순환 인사시스템 전환을 위해 실·국 주무과장과 업무기능 혼합형 과장 보직을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내용의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기존 행정직 서기관으로 제한됐던 △기획조정실 예산과장, 균형발전과장 △재난안전실 안전총괄과장 △경

제진흥국 경제정책과장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장, 관광개발과장, 체육과장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동계올림픽본부 총괄기획과장, 특구육성과장, 시설관리과장 등 각 실·국의 주무과장 직렬에 기술서기관 직렬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규칙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들 과는 행정직은 물론 기술직 서기관까지 과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백오인



고성왕곡마을 민속체험 축제 제13회 고성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축제가 지난 24일 오전 왕곡마을 특설무대에서 개회식을 갖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정부, 다음달부터 '좁비기업' 퇴출 작업

건설사 60곳 '블랙리스트'

<지난해 금감원 공시 126곳 기준>



정부가 이른바 '좁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면서 건설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운영방안을 확정하면서 다음달부터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건설업도 구조조정 의 칼날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17면

2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126개 건설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건설사는 60개사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건설사 비중은 전체의 46.9%로 2013년(45.3%)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한다는 의미로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의 절반가량이 한계기업이며,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차입금이 많아 이자지출 비용이 커지거나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때 떨어지는데, 건설업은 차입금 증가보다는 영업이익 감소의 영향이 더 크다.

총자본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차입금 의존도를 보면 건설업은 올해 상반기 25.2%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3%보다 개선됐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해당 신용등급 'C'이하 무조건 대상 건설업 상반기 기준 13社 포함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767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 2조8994억원 손실로 전환되는 등 수익성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영업 개선으로 차입금을 갚을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구조조정 압박이 거셀 수 있다.

현재 채권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대한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신용위험평가는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건설업종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 기업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는 35개 기업이 C 등급 이하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는데 그 가운데 건설업이 가장 많은 13개를 차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상 기업은 유암코와 주거래은행이 협의해 선정하게 된다"면서 "당장은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실질이 쌓이면 산업별 구조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올 예타 14건 중 9건 통과 2~3년 뒤 공사감소 우려

신규물량 '가뭄'

신규 공사물량 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올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발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14건이 완료된 가운데 9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이 5001억원으로 가장 크고 스국립박물관 건립사업 4552억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3722억원, 스여의도우체국 재건축 사업 1812억원, △서계동 북해문화관광시설 조성사업 1808억원, △중합유동단지~아시아폴리스 혼합도로 개선사업 1375억원, △국가 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브레인(dBrain) 전면개편 1181억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사업 988억원, △중부권 광역우편집중국 건립사업 836억원 등이다.

반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국가

SOC 예산 감소 가능성 속 기대했던 사업까지 '제동'

기재부, 예타 추진 속도전 물량난 부작용 '응급처방'

산단 연장(8413억원)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후면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사업(1441억원) △하이퍼텍스트 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1097억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수산자원 관리 및 이용 기술개발(1040억원) △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673억원) 등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가로막히게 됐다.

아직 4분기가 남아 있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감소 전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44건이 완료된 가운데 이 중 35건이 통과됐고 나머지 9건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신규 공사물량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SOC 예산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마저 줄어들면 건설업계의 물량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실제 발주로 연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보다는 2~3년 후 극심한 물량난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을 연도별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진 사업들이 적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에 속도를 내 통과 사업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경남기자 knp@

까다로운 건설공사대장
과태료 건수 16배나 폭증

행정처분 ‘홍수’

건설공사대장을 제때 입력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사가 폭증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22일까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도급계약 시 공사대장 통보위반을 이유로 지자체가 공고한 건설사 행정처분은 총 7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집계됐다.

이는 신규, 정정, 변경, 철회공고를 모두 포함한 것이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신규 공고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하루에 25개 현장 꼴로 공사대장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

매일 25개 현장꼴로 위반 “신고·변경 내용 너무 많고 현장마다 인력 부족” 호소

는 셈이다. 현재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계약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KISCON에 공사대장을 입력해야 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건설사 소재 지자체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행정처분 홍수가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허위 신고도 포함됐지만, 대부분 신고할 내용이 너무 많고 수시로 해야 해서 때를

놓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사대장 통보 입력은 원도급은 물론 하도급이나 기계대여 계약 때마다 해야 하고, 계약 내용이나 기술자가 변경되면 재입력해야 한다. 하도급사나 계약 내용이 많은 대형 현장은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중소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만만치 않다.

이는 건설사의 과실이지만, 올해 위반 현장이 7309곳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대장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건설사·발주처·지자체 모두 “업무 과부하” 몸살

NEWS & 공사대장 미통보 행정처분 홍수... 제도가 문제인가

공사대장 미통보에 대한 건설사 행정처분이 폭증하면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는 물론 발주처, 행정처분을 내리는 지자체마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경제신문>이 KISCON을 통해 분석한 도급계약 공사대장 통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22일까지 7309건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7299건이었고, 재작년에는 무려 1만9032건으로 검색된다.

공사대장 통보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은 건설사의 과실이다. 그러나 연간 7000~1만9000건의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제도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정명령을 제외한 과태료 처분은 올해 10월22일까지 2085건으로, 작년

929건보다 배 이상 늘었다. 2013년 127건보다는 무려 16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공사대장 통보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적한다.

입력 내용 많고 수시로

KISCON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도급 계약 시 공사개요(공공사업 △공사지역 및 현장소재지 △공종 △산재보험 △근로자퇴직공제 △계약내용)와 수급업체(△대표 △구상사 여부 △업종 및 도급금액), 보증금 납부내역, 현장기술인(△인적사항 △배치기간 △자격현황), 직접시공 계획서 등을 입력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과 분량을 다시 입력해야 한다. 하도급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각 하도급사와 계약할 때마다 입력하려면 수십 번을 넘어선다. 건설기계 대여와 부품제작납품

원도급·하도급 계약 때마다 수십번 넘게 정보 입력해야 계약변경되면 작업 또 반복 시공 아닌 서류작업에 매몰

행정처분 지자체도 하소연 시대에 맞게 규제 정비 필요

계약 때도 업무를 반복해야 한다.

이 과정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니다. 공사 중 계약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작업을 또 해야 한다. 현장 기술자 변경이나 공사대금 수령과 관련한 내용도 입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입력할 내용이 한둘이 아니어서 전담 인력을 두더라도 한번 실수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한 대형건설현장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계약을 하고 팀을 꾸리는 기간에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며 “인력 구성이 늦어질 수도 있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건축현장과 같이 하도급사가 많은 곳은 업무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변경계약이 이뤄지면 하도급 관련 신고도 모두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자체도 제도개선 요구

공사대장 통보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홍수를 이루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지자체에도 업무 과부하가 걸릴 정도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처분 업무를 6명의 직원이 차지구별로 나눠서 수행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해당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당단이 오면 업계 청문을 거쳐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해당 업체와 부딪치는 일도 많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 국토부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일일이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업체에 미리 통보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발주기관 역시 서류작업 때문에 건설사가 처분을 받고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불만이 많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건설현장 기술자들이 본연의 공사나 안전 등의 업무가 아닌 서류작업에 매몰돼 있는 것은 인력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공사대장 통보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바바로’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등의 시스템으로 하도급 대금 관련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공사대장에서도 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며 “시대가 바뀌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설사, 감리, 발주처, 지자체 모두가 원하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정석기자 jskim@

SK건설 세계최대 오일샌드 플랜트 수주비결

핵심기술 보유한 ‘협력사의 힘’ 있었다

국토위, 내년 예산안 24조217억 의결... 정부안보다 2조3624억 늘어

도로·철도 위주로 증액... 신규 SOC사업 탄력 기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공항 평행 유도로 설치, 인천발 KTX 건설 등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해외철도수주지원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활성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 운영 강화 등도 예초 정부안보다 증액되거나 신규로 제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토부 소관 예산(안)을 21조6583억원에서 2조3624억 원 증액(감액 16억 원 포함)한 24조217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일 예결소위 심사결과에서는 총액이 24조759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중복계상되거나 반올림된 예산안 등이 재조정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올해도 지자체 등에서 요구해 온 도로와 철도사업,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국토위 의견을 반영해 최소 20~30% 정도는 증액된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며 "다만 4대강 사업으로 빚에 내몰린 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원 예산은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소관 일반회계분야 주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예산안	수정안	증감액	비고
철도교통편차 시험설비구축	2400	2400	0	자력시험 가능장 신축
해외철도수주지원	5000	5000	0	해외철도시장 진출 지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	400	400	0	체납신고센터 운영비 지원
교통안전시설개선 지원	1500	1500	0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호남권 안전운전체험 교육장 건립	1000	1000	0	티타임조사 연구용역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 운영	1000	1800	800	시장단가 조사 등 강화
경남, 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2000	2000	0	사업 설계비
건축문화진흥	3484	4684	1200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 지원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1113	9113	3200	건축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활성화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	30025	30025	0	정비구역 해제 등 지원
건설기능인 양성 지원	1000	1000	0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중부고속도로 확장·인천발 KTX 건설 등 추가 반영 예결위 심의 주목... 4대강 빛 수공 지원 예산 재검토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도로예산 확대 국토위는 도로분야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인 영동고속도로IC 사업(55억원),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한 창녕~현풍 고속도로 대합IC 설치(300억원, 150억원 증액), 경부고속도로 청성~옥천 확장(5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8억원), 중부고속도로 오창~호법 확장(100억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롭게 편성했다.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1공구 건설(50억원, 43억원 증액), 포상~서광 국도건설(10억원), 장흥~유치 국도건설(14억원, 10억원 증액), 옥천~도암 도로건설(12억원, 10억원 증액) 등도 재조정됐다. 5억원 규모의 조사실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성남~장호원 6공구 △무주~설천 태권도원 진입도로 △상주~문경 △양산 △거제 화동우회도로 △비금~후포 △여수~남해 등이 있다.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사업(300억원,

200억원 증액), 상계~매암과 을숙도~잠립 혼잡도로 개선사업도 각각 10억원을 증액해 76억원, 83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산~도라산 전철화 등 는길 철도분야에서는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춘천~속초, 여주~원주 단선철도 사업의 기본설계용역비 5억원, 15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 건설사업은 설계와 공사 착수 예산을 더해 각각 2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통일 대비와 파주지역 안보관광 활성화 등을 고려한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추진에도 10억원의 설계비를 추가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동북선 경전철 등에도 각각 102억원,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여기에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에도 1380억원을 새롭게 추가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량사업 예산의 40%인 695억원과 부산지하철 1호선 노후시설 개량사업 예산의 60%

인 685억원 등이다.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예산 부활

항공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요청했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설치 사업 예산 34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은 2017년 청주국제공항 군용활주로 재포장공사로 1개 활주로를 민간 및 군용 항공기가 공동사용하게 되면서 혼잡을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과 항공기 비행성능 유지 및 기술분석에도 각각 50억원, 7억원이 반영됐다.

항공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항공레저인프라 구축사업에도 9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에는 △아트센터 건립(32억원) △조치원 우회도로(17억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23억원) △행복도시~공주터미널 연결도로(20억원) △선관위 청사 건립(27억원) 등이,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는 △새만금 용지개발(50억원) △지역산업센터 건립(8억원) 등의 예산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주간입찰동향

조달청, 총 1725억 규모 시설공사 집행 채비

LH, 적격심사대상 3건 대기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10.26~30)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의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양장 축조공사 등 모두 66건, 1725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주와 비교해 입찰건수는 12건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대형공사 물량이 줄면서 추정가격 기준 전체 집행금액은 1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최대 규모 입찰물량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시흥그린센터 소각 시설 환경개선사업이다. 경기 시흥시 수요로 오는 30일 입찰제안을 앞두고 있는 이 공사의 추정가격은 523억원 규모다.

앞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는 GS건설과 태영건설이 각각 대표로 나서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100억~300억원 규모의 중대형공사는 3건의 입찰이 예정돼 있다.

154억원 규모의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양장 축조공사를 비롯해 139억원 규모의 청주 제2순환로(사청주교~송철교차로) 개설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학 2·3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등으로 개찰은 모두 오는 27일 집행된다.

조달청은 이번주에는 1건을 제외한 65건의 입찰이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통도급 대상으로 전체의 약 65%인 1115억원 상당을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 본사는 이번주 추정가격 242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입찰 3건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주(122억원, 2건)에 비해 입찰건수는 1건, 입찰금액은 120억원 증가한 것으로 모두 적격심사 대상공사들이다.

이 중 지난주에서 입찰이 연기된 강릉 유전 A-2BL 전기공사 2공구(145억원)가 유일하게 100억원을 넘어 눈길을 끈다.

봉승권·채희찬기자 chc@